

전주시, 지역건설업체 기 살린다

시, 민간 주택건설업체 현장소장들과 간담회 개최 지역업체 자재 80% 구매·하도급 70% 이상 배정

전주시가 지역 내에서 시공 중에 있는 민간 주택건설업체들에게 지역기업에서 생산되는 건설 자재 등을 우선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지역기업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지역 내 크고 작은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달했다.

시는 21일 전주지역에서 시공중인 민간 주택건설업체 현장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지역자재 구매 확대, 지역인부 고용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주시가 사람·생태·문화·일자리를 중심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지역자재 구매 확대, 지역인부 고용 등을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주시가 사람·생태·문화·일자리를 중심으로 가장 인간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민선6기 후반기 7대 핵심 프로젝트 중 도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기(氣) 살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현재 전주에 시공중인 외지 민간 주택건설업체는 KCC건설과 태영건설,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일신건설, 중흥토건, 보광종합건설, 제일건설, 광신종합건설, 양우건설 등으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소장들도 지역기업 기(氣) 살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각 건설업체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주택건설 현장에서부터 지역업체 생산자재 80% 이상 구매와 지역

업체 하도급 70% 이상 배정 요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역생산 자재 구매 및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 확대는 민간 주택건설업체 현장소장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지난 18일 진행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들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기업 생산제품 사주기와 판로확보 등에 중점을 둔 지역기업 기(氣) 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도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기 살리기는 기업의 사업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운을 뗀 뒤 "기업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시장 주재의 지역기업 기 살리기 현안회의를 격주로 실시하고, 각 부서별 지역기업 제품 구입 실적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해결 등 지원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지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설계하고, 지역 건설업체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애로담당관제'도 도입했다.



전주시는 21일 시청 회의실에서 전주지역에서 시공중인 민간 주택건설업체 현장소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과 지역자재 구매 확대, 지역인부 고용 등을 요청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회의에서 7월부터 재개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사업의 철저한 추진을 주문했다.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은 올 초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급되어 왔으나 사업효과 미비 등의 이유로 중단됐다.

시의회는 지난 1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형편을 감안해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 재개를 요청, 지난 추가경정예산에 총 1억2천800만 원을 편성해 하반

기부터 분기별로 1인당 6매씩 수급자 2만 6천여 명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기로 했다.

양영환 복지환경위원장은 “비록 작은 지원일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활기차게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환경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복지환경국 등 소관부서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시민 의견 수렴 및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활동을 전개한다.

/김영재 기자

김주현 익산시의원, ‘공금횡령’ 재판… 파장 예상

익산시의회 김주현 의원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폐기물처리 업체의 공금을 횡령하고 사업장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검찰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남산면의 한 폐기물처리업체 실질운영자로 알려진 김주현 의원이 이 업체의 공금을 무단으로 사용,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대표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공금을 이사회 결

의 등을 거치고 않고 자녀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이자 변제나 약정이 없음에도 제3자에게 수익원을 대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금을 개인 연금보험료로 사용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시의원 선거 관련 피해 합의금 명목으로 수익원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의 다음 공판은 내달 9일 11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다.

/박용주 기자

여고생 껌안고 얼굴 깨물고... 성희롱 추태 ‘교사’

전북교육청,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 요구

술 취한 상태에서 여고생을 상담실로 불러 껌안고 얼굴을 깨무는 등 성희롱을 일삼아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21일 순창의 한 사립고 A 교사에 대해 학교법인에 중징계 처분(파면)을 요구하고, 관리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아울러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로 A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A 교사는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껌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려 확인하고 학생부실에 온 여고생에게

“뽀뽀하면 봐주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폭언을 자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A 교사가 체벌과 폭언, 부적절한 행위 등을 반복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문제제기했다.

이에 전북학생인권심사위원회는 조사를 벌여 지난달 1일 전북교육청에 A 교사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형사고발을 권고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심의위가 조사한 A 교사에 대한 내용과 검사 결과가 대부분 일치했다”며 “사안이 가벼워 보이지 않아 중징계 요

구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자발찌 떼고 도주한 성범죄자 가평서 검거

군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강경환(45)이 경기도 가평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인 20일 오전 0시38분께 군산에서 도주한 강씨는 이날 오후 1시55분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한 도로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강씨가 타고 달아난 구형 SUV(63도 8464) 차량이 가평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차에 타고 있던 강씨를 붙잡아 군산으로 압송 중이다.

/박용주 기자

30년 지기 살해 조선족 징역12년

뺨을 맞은데 대한 앙갚음으로 3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조선족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21일 30년 지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조선족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0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상가 앞길에서 A씨(59)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인근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중국 교포 5명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맥주를 바닥에 흘리는 등의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A씨에게 뺨을 맞자 화가 나 편의점에서 흉기를 사들고 쫓아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주 기자

전주, 동물복지 다올마당 회의

전주시가 개와 고양이 등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갖춰 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21일 전주시장실에서 수의학과 교수와 수의사, 유기동물보호센터 관계자, 환경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시민들로 구성된 전주 동물복지 다올마당 첫 회의를 개최했다.

동물복지 다올마당 위원들은 향후 전주시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유기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놀이터 등 동물보호·복

지 센터 건립과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게 된다.

시가 이처럼 반려동물과 반려동물들을 키우며 생활하는 시민들을 위한 동물복지 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국내 반려동물 사육인구가 1,000만 명이 넘어지면서 반려동물 유기문제와 이웃 간의 갈등 유발 등 다양한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유기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지난해 1259마리, 지난 상반기에만 630마리가 유기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김영재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